

“균형과 협력으로 남구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서성부 남구의회 의장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제338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

제338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

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국가유공자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제9대 남구의회도 이제 1년이라는 임기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1년 동안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민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난해 회계연도의 결산 승인을 다루게 됩니다. 결산 심사는 한 해 동안의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예산 낭비 요소는 없었는지 꼼꼼히 점검하여 향후 예산 편성 및 올바른 집행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으나 남구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다 안전 심의에 성실히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 속에서 수레의 두 바퀴처럼 협력할 때 남구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촉

남구의회(의장 서성부)는 6월 10일 의장실에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위촉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은 김철현 의원, 박구술 의원을 비롯한 남구의회 소속 의원 2명과 민간위원 5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날 서성부 의장은 “의정활동의 내실을 다지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연구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심의위원 여러분께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심의를 해주시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33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최

남구의회(의장 서성부)는 6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3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의회는 개회 첫날인 6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출을 통해 제1차 본회의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12일 상임위원회별(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창현, 경제복지도

시위원회 위원장 이종현)로 회의의 개의를 위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했다.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경숙)에서 종합심사를 받고 원안가결되었다.

의회는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

| 의 안 명 | 처리결과 |
|--|------|
|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인의 건 | 원안가결 |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원안가결 |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원안가결 |
|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 | 원안가결 |
| 부산광역시 남구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부산광역시 남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 부산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현4동 복합청사 건립사업) | 원안가결 |
| 부산광역시 남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자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부산광역시 남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부산광역시 남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부산광역시 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 부산광역시 남구 간담2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찬성의견 |
| 부산광역시 남구 율호A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 찬성의견 |
| 부산광역시 남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 부산광역시 남구 중개보수 자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10건을 포함한 16건의 안건에 대해 상임위 심사결과와 같이 최종 의결했다. 7명의

원의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2025년 남구의회 첫 정례회는 막을 내렸다.

제33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김철현 의원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철현 의원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 고지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조례청구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며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주민 참여 보장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박미순 의원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축제 활성화 조례안—박미순 의원
—부산광역시 남구 지역축제장 이용 및 방

문 증진과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함

5분 자유발언

유튜브 '부산광역시남구의회' 또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홈페이지(<https://council.bsnamgu.go.kr>)'를 통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승고한 희생, 끝까지 예우로 기억되길



이종현 의원
(문현1·2·3·4동)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자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공헌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국가를 위해 젊음을 바친 분들의 노후와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보훈급여금 지급,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존재하지만, 정서적·사회적 돌봄과 사후 예우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 속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지역의 세심한 행정과 보원적 지원 체계를 통해 공백을 해소해야 하며 이에 저는 남구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삶 전반을 존중하며 마지막 길까지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남구는 2023년부터 「부산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보훈명예수당 월 30만원

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까지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인 예우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례에도 장제 지원이나 유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등은 담고 있지 못한 점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는 자치구 최초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정 정례시장 등 8곳의 빈소 사용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며, 마포구는 3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등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인간적인 보훈정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도 장례서비스 지원, 유가족 심리지원, 지역 중심의 보훈 돌봄 체계 구축 등 남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실태에 맞는 보훈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일생에 걸친 책임이었고, 지역사회가 그들의 삶의 끝을 책임지는 것은 진정한 보훈입니다. 남구가 진정한 보훈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 자치구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구 명칭 변경, 구민 공감 없는 추진 반대



허미향 의원
(용당·김남1·2·9동)

저는 '남구 구 명칭 변경 계획'에 대해 강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밝히고자 합니다. 구 명칭은 단순한 브랜드나 문구가 아니라 조소지, 행정장, 각종 공공기록, 부동산 등기, 간판 등과 같은 실생활 상단의 장례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등 각 지자체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이고 인간적인 보훈정책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구도 장례서비스 지원, 유가족 심리지원, 지역 중심의 보훈 돌봄 체계 구축 등 남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실태에 맞는 보훈 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조례 정비를 통해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은 일생에 걸친 책임이었고, 지역사회가 그들의 삶의 끝을 책임지는 것은 진정한 보훈입니다. 남구가 진정한 보훈의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 자치구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독자에 불과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구 명칭을 '유엔남구'로 정해 놓고 진행하려는 의도가 너무나 눈에 보입니다. 이번 구 명칭 변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원하는 구명으로 변경하기 위해 설계되었던 이는 정상적인 용역이 아닌 편파적 오작행에 불과합니다. 부산 북구나 인천 미추홀구의 사례에서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북구는 주민 공감대 없는 구 명칭 변경으로 실패해 버렸고, 미추홀구는 오랜 기간 동안 구민들의 설득과 홍보 끝에 겨우 추진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소모입니까? 우리 남구는 최근 지역경제 침체에 따라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들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에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구 명칭 변경은 충분한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 없는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구정의 주체는 구민이며,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구민의 이름을 바꾸기 전에 먼저 행정의 방식부터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오륙도페이 활성화로 민생 회복 지원 촉구



박찬원 의원
(용호1·2·3·4동)

6월 19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20조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화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채무조정 등 민생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조속한 처리로 빠른 시일 내 민생지원금이 남구민들에게 지급되길 바랍니다. 민생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남구의 오륙도페이가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지난 3년간 민선8기 기간 중 지역화폐 전반을 살펴봤습니다. '남구 사랑상품권' 즉 오륙도페이 예산은 2022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습니다. 남구의 예산이 부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여러 사업에는 매년 예산이 증액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일부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자금 전출도 있었습니다. 오륙도페이의 이용률이 저조했습니까?

그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오륙도페이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95% 이상이었지만, 인센티브 축소와 민선7기에 비해 소극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은 많이 아쉬워합니다. 동백전은 정부 예산 축소에 따라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오륙도페이는 구 자체 재원으로 시작한 정책인데 왜 동백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센티브 비율을 낮추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구정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본질적인 원인은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실행 의지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는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민 소비심리 확대에 이은 세수 증가 등 정책 효과가 비교적 명확한 사업입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필요한 실용적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취를 잡는데 고양이와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생년에 지역화폐 활성화가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주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행정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남구민을 위한 정책에 따라 고양이 빨간 고양이 구별은 무의미합니다.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 시민 공간으로!



박미순 의원
(용호1·2·3·4동)

용호동 주거환경 개선과 남구 미래 도시기반 마련을 위해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과제인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이전에 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은 현재 1만 3천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과 대학가에 둘러싸인 도심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노후된 시험장은 도시미관 저하는 물론, 시험차량의 반복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체증, 보행자 안전 위협, 소음과 공해 등 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남구정을 비롯한 다양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이전지를 검토 중입니다.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전 이후 부지 활용 방안입니다. 해당 부지는 약 5만 9천㎡에 달하는 도심의 핵심 자산으로 단순한 개발이 아닌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첫째, 복합 공공문화시설 조성입니다.

열린녹지공간, 야외공연무대, 전시갤러리, 실내놀이 체험시설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청년 맞춤형 창업·활동 공간 조성입니다. 인근 대학과 연계한 코워킹 스페이스, 메이커스페이스, 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청년이 머무는 남구로 전환해야 합니다. 셋째, 친환경 스마트 도시 시범지구 조성입니다. 빗물정원, 스마트팜, 탄소기재 플랫폼 등을 도입해 탄소중립 도시 모델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용역과 검토 과정의 투명성, 주민 의견 반영, 공공성과 자생의 균형을 갖춘 사업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개발 방향 역시 공공성 중심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은 남구 도시공간의 재구조화로 남구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이 끝나는 타이밍입니다. 주민의 불편을 외면하지 않는 책임 행정, 변화에 앞장서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통해 남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수도 부산 실현, 남구가 주도해야



박구술 의원
(대연4·5·6동)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을 21세기형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북극항로 거점화 ▲해사법원 설립 ▲HMM 본사 부산 이전 ▲동남투자은행 설립 총 다섯 가지 핵심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 공약들은 해양산업을 중심으로 한 부산의 산업 재편, 청년 일자리 창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우리 남구가 반드시 선점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 이전을 언급한 만큼 정부는 추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강서구·사하구·동구는 유치를 위해 빠르게 대응하는 반면, 남구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남구청이 주도해 우리 지역의 입지 장점과 인프라 우위를 대내외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 운하보다 항로

가 40% 이상 단축되는 차세대 해상 물류 루트로 부산이 아시아 해양 관문도시로 도약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해사법원 설립은 부산이 국제해사법 중심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은 해운산업의 전략 본거지를 확보하고, 부산이 해양물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 남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공약과 연계된 정부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앙정부 및 부산시와의 협력 채널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부산이 바다로 다시 나아가기 시작입니다. 그 향해의 시작점에 우리 남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이 단지 '좋은 말'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 남구가 해양수도 부산의 미래를 이끄는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서민을 위한 기본대출 도입 제안



김근우 의원
(대연1·3동)

본 의원은, 우리 남구가 '새로운 기회'의 지자체'로 나아가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인 공공기본대출을 제안드립니다. 어떤 청년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개인회생에 이르고, 자영업자는 신용이 낮아 고금리 사금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회의 사다리가 끊긴 사회, 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그 해법 중 하나가 바로 기본대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신용도가 낮은 주민에게 연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단순 금전 지원이 아닌, 공공이 기회를 담보하는 사회적 안전장치이며, 경제적 자립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정책 수단입니다. 무상대출이 아닌 회수가 가능한 대출이므로 재정적 지속 가능성과 책임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구가 이 시범사업을

시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고 확신합니다. 청년과 1인 가구가 밀집해 있고,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 지역 특성상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주민 수용성도 높아 사업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실천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본대출 시범사업 운영 조례 마련. 둘째, 부산시와 중앙정부와 시범사업을 제안 및 협조 요청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수백억을 넣을 만큼 재정상태가 양호하므로 재난지원금도 동시에 지급해 원도 내에서 대출을 보장하는 제도화합니다. 단순 금전 지원이 아닌, 공공이 기회를 담보하는 사회적 안전장치이며, 경제적 자립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정책 수단입니다. 무상대출이 아닌 회수가 가능한 대출이므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책임성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남구가 이 시범사업을